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글로벌전략연구본부	성명	김엄지	직급	부연구위원/실장
	소속	극지전략연구실	성명	유지원	직급	연구원
	소속		성명	한다희	직급	연구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관련사업 (예산항목)	- 「2026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내기반 조성 사업」 (용역, 3월 중 계약체결 예정) * 「북극권 해양수산 협력기반 강화사업」(일반)에서 선집행 후 과목경정 예정					
출장기간	2026.01.31.(토) ~ 2026.02.07.(토)			출장지		노르웨이(트롬쇠)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1.31(토)	부산→김포→인천	이동		대한항공 KE 1826 / 공항버스(김포→인천) (유지원, 한다희)	
	1.31(토) ~ 2.1(일)	인천(23:00)→헬싱키 →트롬쇠(08:25)+1			핀에어 AY 042(인천→헬싱키) AY 935(헬싱키→트롬쇠)	
	2.2(월) ~ 2.5(목)	트롬쇠	Arctic Frontiers 참석		-	
	2.2(월)	트롬쇠	오전	- 노르웨이 극지연구소 (Norwegian Polar Institute, NPI) 방문 및 업 무협의(정부대표단)	-	
			오후	- KM-GGCI 북극녹색해운 세션 개최 - 북극프론티어 세션 참석		
	2.3(화)	트롬쇠	오전	- 북극경제이사회 면담(정 부대표단)	-	
			오후	- 북극프론티어 세션 참석 - 한국-노르웨이 양자면담 (정부대표단) - 북극프론티어 세션 참석		
	2.4(수)	트롬쇠	오전	- KMI 북극거버넌스 세 션 개최 - NPAC 운영위원회 업무 협의	-	
			오후	- 노드대학교 CHNL, HNC 업무협의 - 북극프론티어 세션 참석		
	2.5(목)	트롬쇠	오전	- 북극경제이사회 업무협의 - 북극프론티어 세션 참석	-	
			오후	- Ocean Conservancy 업무 협의		
	2.6(금) ~ 2.7(토)	트롬쇠(10:25)→헬싱 키 →인천(12:25)+1	이동		핀에어 AY 542(트롬쇠→헬싱키) AY 041(헬싱키→인천)	
2.7(토)	인천→김포→부산	에어부산 BX 8817 / 공항버스(인천→김포) (유지원, 한다희)				
출장성과	○ 출장목적 달성 정도 - 2026 북극프론티어에서 '북극녹색해운'과 '북극거버넌스'를 주제로 세션을 개최하여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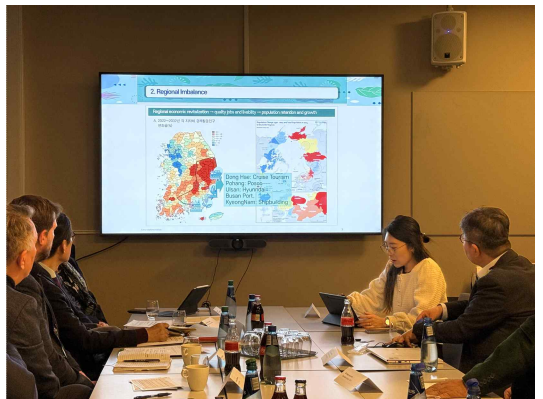
	극 관련 연구·정책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이해도 제고 - 북극이사회 고위 관계자 및 북극권 국가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북극이사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한국의 역할 및 협력 가능성을 논의(정부대표단) ○ 주요 성과 - 북극 녹색해운 및 지속가능한 북극항로 이용에 대한 국제 논의에 참여하여 북극항로 활용 가능성과 협력 기반 확대 - 북극이사회 관계자 및 북극권 국가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북극 정책 방향 및 협력 의제를 공유하고 북극 거버넌스 논의 참여 기반 확대
향후계획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 북극 연구기관 및 북극경제이사회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협력 방향 모색 - 극지해소식지 2월 호 「극지의 창」에 '2026년 북극프론티어' 참석 결과 공유 예정 - 2026년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내기반 조성사업」 최종보고서에 'Arctic Frontiers 2026' 참석 결과 제출 및 유관기관과 공유 예정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 북극 주요 기관 및 북극권 국가와의 양자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북극 전략 추진을 위한 협력 의제 구체화 및 향후 정책 추진에 활용 - 북극협력주간 '청색경제세미나' 세션 연사 초청 등을 통해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교류 기반 확대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 주요업무 수행 결과 별지 작성 후 첨부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업무①	노르웨이 극지연구소(Norwegian Polar Institute, NPI) 방문 및 업무협약(정부대표단) (2.2, 월)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2.02.(월) 11:30~13:00 / 노르웨이 극지연구소 - (주요 참석자) Camilla Brekke 소장(NPI), NPI 관계자 3명, 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대표, 최다빈 녹색환경외교과 사무관, 성석언 극지정책팀장(해수부), 신형철 소장(극지연구소), 최선웅 정책개발실장(극지연구소), 정지훈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KoARC) 사무총장(극지연구소), 김엄지 KMI 극지전략연구실장, 유지원 KMI 극지전략연구실 연구원
수행결과	□ (NPI) - 2032~2033년에 예정되어 있는 '제5차 세계 극지의 해'는 남북극을 모두 포괄하는 프로젝트로, 다자간 대형 국제과학 프로그램인바, 극지의 변화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해빙감소-해수면 상승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 - 사무국 유치 국가의 경우 아직 정해진 바는 없으며 3월 말 제안서가 최종 제출될 예정이나, 노르웨이가 사무국을 유치할 경우 사무국은 트롬쇠(Tromsø)로의 설치를 예상하고 있으며 공동 사무국 및 위성 사무국(satellite office)의 자격으로 한국-칠레와의 협업 제안 □ (KOPRI) -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극지'라 하면 북극만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남북극을 포괄한 극지 연구가 글로벌 맥락 상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민에게 알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 (정병하 대사) - 제5차 IPY를 앞두고 2028년 6월 제4차 UN해양총회(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를 한국에서 개최하는바, UNOC와 IPY의 연계 또한 고민할 수 있으며, 매년 12월 한국 부산에서 진행되는 국제 컨퍼런스인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을 통해서도 노르웨이-칠레와의 3자 협력 가능할 것으로 판단
	 
업무②	KMI-GGGI 북극녹색해운 세션 개최 (2.2, 월)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2.02.(월) 15:30~17:00 / Saga Quality Hotel 회의실 - (주요 참석자) 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대표, 김상협 GGGI 사무총장, 신형철 KOPRI 소장, Gunnar Wilhelmsen 트롬쇠 시장, Jørn-Even Hanssen 트롬쇠 항만공사장, Mark Stark Mærsk Mc-Kinney Møller Center 매니저, KMI 김엄지/한다희 등
수행결과	<주제: High-Level Roundtable on Green Shipping Corridors and Ports> □ (신형철 극지연구소 소장) - 그린 해운의 핵심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항로 확보, △탈탄소화, △블랙카본 감축, △해양 생태계 및 고래 이동 경로 보호, △원주민 지식 존중 및 참여임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특히 블랙카본은 북극 온난화를 가속하기에 관리가 필요하며, 육상 교통처럼 해운에서도 청정연료로의 전환이 필요함 - 북극항로는 △화물정보, △항로, △해빙/기상, △생태계 영향, △원주민 지식 등 방대한 데이터를 생성하기에 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아카이브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김엄지 KMI 극지연구실 실장) - 한국의 북극 해운 전략은 △균형 잡힌 지역경제 발전 촉진, △국제협력 강화 2가지 주요 축으로 구성되며, 북극항로는 기존 항로를 대체하는 수단이라기보다,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대체 항로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존재함 - 북극 해운에 대한 접근은 단순히 더 짧은 항로가 아닌 △저탄소·빙해 운항이 가능한 선박 개발, △청정연료 병커링 및 안전 취급이 가능한 항만 인프라 업그레이드, △국제 규범·표준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 △암모니아·수소 등 미래 에너지 화물에 대한 정량적 검증 연구 확대 등과 같은 패키지 전략으로 준비되어야 함 □ (Mark Stark Mærsk Mc-Kinney Møller Center 매니저) - 그린 회랑의 핵심은 참여 항만의 개수가 아닌 제로(또는 준제로) 배출 연료를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이 연료에는 그린 암모니아·e-메탄올·바이오메탄올·바이오메탄 등이 해당됨 - 그러나 그린 연료는 높은 연료 단가와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인해 초기 진입 장벽이 높으며, 현재 규제 수준은 이러한 비용 격차를 상쇄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사전타당성 분석: 지리적 범위를 정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레이어를 겹쳐 해당 지역에서 가능한 잠재 그린 회랑 후보군 도출(해당 지역의 에너지 프로젝트, 수출입, 항로·선박 운항 데이터, 규제·정책 등 에너지 전환에 영향을 주는 요소) ** 타당성 분석: 대체연료 공급망의 기술적·규제적 타당성 검증(그린 연료 생산·공급, 항만 및 병커링 인프라, 선박 탈탄소 경로, 화주 지불 의사 등)
	 
업무③	북극프론티어 세션 참석(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s, Geopolitics, China, and the Arctic) (2.2, 월)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2.02.(월) 15:30~17:00 / Clarion Hotel The Edge, Margarinfabrikken - (주요 참석자) Gørild Heggelund 연구위원 (프리츠프난센연구소(FNI) 좌장), Iselin Stensdal 선임연구원 (FNI), Anders Edstrøm 연구원 (노드 대학교), Ida Soltvedt Hvinden 연구원 (FNI), Nick Bæk Heilman Kaya Partners 선임 등
수행결과	□ (Iselin Stensdal 선임연구원) -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코발트를 사례로, 생산이 콩고민주공화국에 집중됨과 동시에 중국이 채굴·정제·배터리 생산까지 가치사슬을 장악하며 자원-인프라 교환 전략과 일대일로를 통해 이를 강화해 온 구조를 설명. 미국이 중국 의존도 축소를 위해 콩고와 전략적 협력을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확대하는 가운데 가격 변동성과 수출 규제가 공급망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북극 논의 역시 이러한 글로벌 핵심광물 경쟁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필요성 강조 □ (Ida Soltvedt Hvinden 연구원) - 심해채굴은 망간·니켈·코발트 등 해저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녹색전환과 공급안보 논리 속에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상업적 채굴은 개시되지 않았으며 국제해저기구 (ISA)가 관련 규정을 마련 중이고 일부 국가는 자국 대륙붕 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 - 특히 2025년 미국 행정부가 UNCLOS 체계를 우회해 자국법 기반으로 채굴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은 '인류공동유산' 원칙을 약화시키고 병행 체제 형성을 통해 국제 해양 거버넌스를 훼손할 위험이 있으며, 심해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속도 중심 접근은 장기적 환경·제도적 리스크 초래 * 인류공동유산 원칙이란, 심해저, 우주 등 특정 영역을 개별 국가나 기업의 착취에서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인류 전체가 공동으로 관리 및 보존해야 한다는 국제법상 개념 □ (Anders Edstrøm 연구원) -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 구상 이후 북극에서 투자·연구·에너지 프로젝트가 확대되었으나 실제 광물 투자 성과는 과장된 측면이 있고 취소되거나 불확실한 사업도 적지 않다고 분석. 에너지안보 개념을 광물안보로 확장해 공급망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특정 국가 배제보다 공급 다변화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전략적 자율성 추구 과정에서 중국을 전면 배제하는 접근은 오히려 취약성을 높일 수 있음을 지적하며 안보와 경제 논리의 균형적 고려 필요성 강조
업무④	북극경제이사회 면담(정부대표단) (2.3, 화)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2.03.(화) 08:15~08:45 / 북극경제이사회 사무국 - (주요 참석자) Mads Qvist Frederikson 사무국장 (북극경제이사회), Kai Simon Eikli Yuen ksey 국제협력 및 기후부문 국제자문위원 (노르웨이선주협회), 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대표, 최다빈 녹색환경외교과 사무관, 성석연 극지정책팀장(해수부), 신형철 소장(극지연구소), 최선웅 정책개발실장(극지연구소), 정지훈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KoARC) 사무총장(극지연구소), 김엄지 KMI 극지전략연구실장, 유지원 KMI 극지전략연구실 연구원
수행결과	□ 북극 산업 동향 설명 - (Mads AEC 사무총장) 북극에서는 현재 △안보·방위 투자 증가, △그린 해운 및 그린 회랑 개발, △핵심광물 개발, △위성 개발 등의 새로운 산업 트렌드가 확산 - 지난 1월 30일 노르웨이 국방물자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천무 16문, 유도미사일, 종합군수지원 등을 포함하는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북극간 방위 협력 또한 공고화 - 그린해운 측면에 있어서는, 북유럽 각료이사회(Nordic Council of Ministers)가 북극해운에 대한 지원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AEC 내에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며 관련하여 KMI와의 협력 가능성을 기대 □ 한국 정부의 북극 정책 방향 - (정병하 대사) 현재 북극항로를 중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정 과제가 제시되며 해양수산부 내에서는 북극항로 추진 본부가 신설되는 등, 올해 9월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위한 준비 지속 - 현재 관련 준비, 기획 단계에 있으나, 시범운항 및 상업운항을 위해서는 대러제재 고려가 필수적이라 생각. 현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명확한 타임라인을 만들어 각 단계별 목표와 도전과제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Kai Simon Eikli Yuen ksey 위원) 노르웨이선주협회는 단기·중기적으로 북극항로를 활용하지 않고자 함. 이는 △높은 채빙선 건조 비용, △폴라코드(Polar Code) 준수를 위한 인프라 유지 비용, △선원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안전 문제, △러·우 전쟁으로 인한 수색구조 협력 약화, △기타 인프라 부족 등이 이유 - 또한, 그림자 선단(Shadow Fleet)과 같은 대러제재 회피 유조선이 북극해에서 20% 가량 운항 중인데, 100대의 선령이 오래된 유조선 중 거의 90척 이상이 이같은 그림자 선단인 상황. 이들은 IMO 규정을 미준수하고 있어, 북극해운 규범을 분열시킬 위험을 내재 - (Mads AEC 사무총장) AEC는 북극해운 개발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북극항로(NSR)만이 북극해운의 전부는 아니므로 노르웨이 연안, 그린란드 해운 등에서도 북극해운 관련 산업 추진이 가능 -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북극항로 뿐만 아니라 항로 외의 북극해운 연관 산업 및 기타 북극항로 루트 외의 해양에 대한 관심을 통해, 보다 넓은 시작에서 '북극해운'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업무⑤	북극프론티어 세션 참석(Arctic State of Affairs) (2.3, 화)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2.03.(화) 11:00~12:30 / Clarion Hotel The Edge 회의실 - (주요 참석자) Espen Barth Eide 노르웨이 외무장관, Vivian Motzfeldt 그린란드 외교·연구부장관, Mary Simon 캐나다 총독, Asa Rennermalm 러트거스 대(Rutgers Univ.) 교수, Kaja Kallas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Christian Danielsson 스웨덴 총리실 국무차관
수행결과	□ (Espen Barth Eide 장관) -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북극 내 전략적 활동 확대, 핀란드·스웨덴의 NATO 가입 등으로 북극 안보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 북극이사회는 현재 운영 유지 단계(holding operation)에 있으며, 현 상태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 국제법과 영토 보전 원칙은 북극 질서의 마지막 한계선(red line)이며, 과학과 지식 기반 북극 정책의 중요성 강조 □ (Mary Simon 총독) - 북극의 미래는 북극 주민의 손에 달려 있으며, 자결권과 공동체 회복력은 어떠한 지정학적 논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 식량안보, 주거 및 인프라, 청정에너지, 교육·청년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지역 역량 강화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북극 안보 담론은 공허해질 수 있다고 지적. 캐나다는 그린란드의 자결권을 명확히 지지하며, 연대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언급 □ (Vivian Motzfeldt 장관) - 최근 그린란드가 글로벌 정치의 중심 이슈로 부상한 상황을 언급하며, 자결권과 영토 보전은 절대적으로 지켜내야 할 한계선임을 명확히 함. 그린란드는 국제법, 민주주의, 영토 통합성이라는 원칙 위에 서 있으며, 어떠한 외부 압력 속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고 강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조. 현재 상황은 긴장과 불확실성을 동반하지만, 외교적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 □ (Kaja Kallas 고위대표) - EU는 기존의 기후.환경을 중심으로한 북극으로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안보 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북극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북극의 전략적 가치 증대는 EU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며, 북극은 이제 대서양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공간이라고 평가. NATO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EU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 □ (Christian Danielsson 국무차관) - 북극은 더 이상 저긴장 협력 지역이 아니며, 유럽 안보 구조 속에서 하이노스(High North)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었음을 강조. NATO 차원의 방위 역량 강화와 유럽의 자주 방위 능력 확대는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언급. 북극 안보는 군사적 차원뿐 아니라 경제·자원·통신 인프라 측면에서도 중요한 전략 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설명  
업무⑥	한국-노르웨이 양자면담(정부대표단) (2,3, 화)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2.03.(화) 14:00~15:00 / Clarion Hotel The Edge 회의실 - (주요 참석자) 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대표, 최다빈 외교부 사무관, Solveig Rossebø 북극이사회 노르웨이 고위관료대표, Seim Knut 북극이사회 노르웨이 부고위관료대표, KMI 김엄지
수행결과	Q1. 북극이사회 활동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는지? (한→놀) A1. 그렇지 않음. 러시아 제재로 일부 제약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사안들은 계속 논의되고 있으며 대면회의가 제한되어 활동이 축소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온라인 회의는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고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또한 대면회의 재개를 장려하고 있음. Q2. 그린란드 이슈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놀) A2. 그린란드 이슈는 북극이사회 차원의 이슈라기보다는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직면한 이슈이며, 그린란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 Q3. 북극항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놀→한) A3-1. 북동항로·북서항로·중앙북극해를 모두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대러제재, 지정학적 이슈, 해빙 및 결빙 조건 등 다양한 도전요인이 존재함. 이 중에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도 있으나 대응 가능한 부분도 있으며, 잠재적 이점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이를 어떠한 방식과 경로로 구체화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임 A3-2. 약 10년 전 키르케네스에서 북동항로를 통한 시범운항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운항 자체는 성공적으로 평가됨. 단, 얼음이 단순히 녹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얼음 덩어리가 떠다니기 때문에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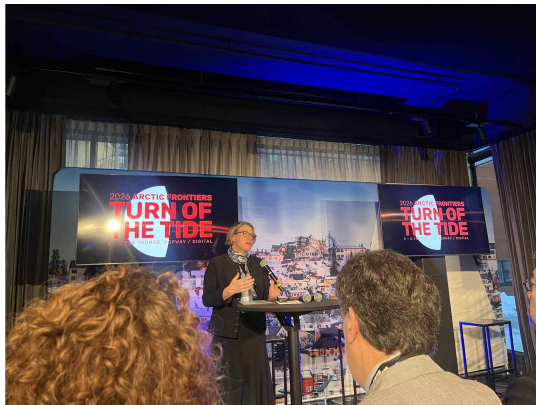
	예측 불가능성은 더욱 증대되었으며, 북서항로의 상용화는 더욱 먼 미래 이야기임 Q4. 현재 러시아와 협력 중인 분야가 있는지? (한→놀) A4. 러시아와의 협력이 유지되고 있는 분야는 수산 분야이며, 수색·구조(SAR)의 경우 공동훈련은 중단된 상태이나 실제 상황 발생 시에는 양국이 여전히 공동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Q5.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항로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와 함께 보험 미가입 선박이나 AIS를 비활성화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의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러한 방식의 운항을 사실상 방지하는 것이 최선인지, 혹은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한→놀) A5-1.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이 없으며, 러·우 전쟁이 종결될 때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음. 전쟁 이전에는 북극해 개방 가능성을 전제로 국제규범 정비 및 관리체계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전쟁으로 인해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A5-2. 또한 중국은 현재 러시아 석유와 가스를 활용하고자 북동항로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막을 방도는 없으며 그림자 선단 또한 모니터링하고 있는 수준임 A5-3. 중국·한국·노르웨이 등 어느 국가의 기업이든 경제성이 확보되는 순간 북극항로를 활용할 것임. 그러나 현재는 얼음의 이동이 예측 불가하여, 경제성이 높지 않은 상황임
업무⑦	북극프론티어 세션 참석(Reconciling Security,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in the Arctic) (2.3, 화)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2.03.(화) 15:30~17:00 / Clarion Hotel The Edge 회의실 - (주요 참석자) Dag Rune Olsen UiT 총장, Oda Bjerkan UN 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 노르웨이 CEO, Andreas Raspotnik 노드 대학교 교수, Lars Saunes 전 노르웨이 왕립해군 및 미 해군대학(USNWC) 교수, Øyvind Dunsæd 노르웨이 해안경비대 준장 및 사령관, Michael Reiffenstuel 독일 연방 외무부 서발칸·튀르키예·유럽평의회·OSCE 및 북극정책 담당관, Amber Gell KSAT 전략 및 파트너십 담당 등
수행결과	□ (Oda Bjerkan CEO) - 기후변화는 전통적 의미의 안보적 위협이나 전쟁과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사회 기반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구조적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 에너지 공급 불안, 물 부족, 공급망 붕괴, 투자 위축 등은 외부 적의 공격이 아닌 기후위기의 결과일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구조적 리스크로서 안보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 NATO 방위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정하면 서도, 이는 새로운 기후 부담을 동반할 수 있음을 지적 □ (Øyvind Dunsæd 사령관) - 북극에서 안보와 지속가능성은 환경 변화, 자원 경쟁, 전략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연결된다고 설명. 북극은 지구 평균보다 4배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으며, 해빙은 북극항로 상용화 가능성과 북극 자원으로서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환경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 러시아의 군사력 확대와 NATO의 북극지역 훈련 증가, 그리고 하이브리드 위협 가능성은 북극 안보 환경을 더욱 복잡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평가 □ (Lars Saunes 교수) - 현재 진행 중인 북유럽 3국(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의 통합 방위 협력은 새로운 지역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 그러나 군사적 준비태세 강화와 핵 억지 관리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 하며, 확산 관리(escalation management)가 향후 북극 전략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 □ (Andreas Raspotnik 교수) - '북극에 대한 종합적 이해(Arctic literacy)' 문제를 지적하며, 북극이 여전히 빙하와 북극곰 이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미지로 단순화되어 소비되고 있다고 비판.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북극의 구조적 위협임에도 충분히 인식되지 않는다고 설명. 북극을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지역과 정책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 □ (Michael Reiffenstuel 담당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의 안보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설명. 2024년 9월 북극 가이드라인(Arctic Guidelines)을 개정하며 북극 지역의 안보 및 안정에 대한 요소를 보다 강조하였으나, 이는 기후변화 지속가능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요소임을 강조 □ (Amber Gell 담당) - KSAT는 전 세계 저궤도 위성 데이터의 80% 이상을 수신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복원력(resilience)을 강화하는 요소라고 설명. 한 지점이 차단되더라도 다른 지점에서 수신 가능하다는 점은 안보와 지속가능성 모두에 기여하는 구조라고 강조 □ (Dag Rune Olsen 총장) - '안보 vs 지속가능성'이라는 구도를 거부하며, UN SDG 16*을 인용해 평화 없이는 지속가능 발전도 불가능하다고 강조. 아울러, 대학의 역할은 비판적 사고를 넘어 해결책을 제시하는 혁신 역량을 기르는 것이라 하며 북극의 가장 큰 구조적 위협은 기후뿐 아니라 인구 감소이며, 청년 유치와 지역 매력도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설명 * UN SDG 1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하고,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며, 모든 수준에서의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  
업무⑧	KMI 북극거버넌스 세션 개최 (2.4, 수)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2.04.(수) 9:00~10:30 / Clarion Hotel The Edge 회의실 - (주요 참석자) Jennifer Spence 교수 (하버드 케네디스쿨), Rolf Rødven 사무총장 (북극이사회 AMAP), Gosia Smieszek-Rice 부사무총장 (북극이사회 AMAP), David Balton 선임연구위원 (하버드 케네디스쿨), 김엄지 KMI 극지전략연구실장, 정지훈 KOPRI 한국북극연구건설소시엄(KoARC) 사무총장, 유지원 KMI 극지전략연구실 연구원, 한다희 KMI 극지전략연구실 연구원
수행결과	<주제: Thriving Together in a Globally-Connected Arctic: Re-framing Governance Beyond Exceptionalism> □ (Jennifer Spence 교수) - 기존 북극 담론인 '북극 예외주의', '기후 중심 서사', '경쟁과 패권' 중심 내러티브의 한계 지적. 더 이상 정책 설계와 현실 대응에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내러티브라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 제기. 이의 대안으로 '글로벌하게 연결된 북극'과 '지역이 주도하는 북극'이라는 이중 구조의 새로운 내러티브를 제안하며, 북극 거주민과 원주민이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점 강조 □ (David Balton 위원)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북극 예외주의 시대의 종식과 북극이사회의 기능 약화, 그 경과를 설명.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면 회의 중단, 장관급 회의 부재, 러시아 포함 고위급 협의 중단 등 제도적 제약 상황 언급. 정치적 무게와 전략적 방향성 약화 문제 제기 - 제도적 연속성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바, 북극이사회의 전략 계획 재가동, 의장국 간 조기 조율, 워킹그룹의 유연한 운영 등 복원 전략을 제안. 러시아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 관련 유지 필요성 강조하였고,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보 제공과 미래 대비 준비의 중요성 제시 □ (Gosia Smieszek-Rice 부사무총장) - 북극을 '평화의 공간'으로 만든 핵심 동력으로서 국제 과학협력의 역할 조명. 국제 북극 과학 위원회(IASC), 북극환경보호전략(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Strategy),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활동 등을 통한 데이터 공유의 축적 과정을 설명하며, 과학협력이 단순 지식 생산을 넘어 신뢰 구축 메커니즘으로 기능해왔다는 점 강조 - 원주민 지식과의 공동생산(co-production) 확대 흐름을 언급하며, 북극 거버넌스의 특징인 원주민 지식을 포함한 다중 지식 체계의 중요성을 설명. 현재 지정학적 분열 속 러시아와의 과학 교류 축소 문제를 지적하는 등 향후 국제공동연구 체계 재구성 필요성 제안 □ (Rolf Rødven 사무총장) - 북극 협력은 '완벽함'이 아닌 '최적의 상태'를 지향하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고 설명. 스톡홀름 협약, 미나마타 협약뿐만 아니라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AMAP의 북극기후영향평가(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 ACIA) 등 불완전하지만 실질적 성과를 낸 사례를 제시하였고, 그 중 ACIA를 글로벌 기후 의제 형성에 기여한 리더십 사례로 평가 □ (정지훈 사무총장) - 지정학적 갈등 속 '작은 성공의 축적' 전략 제시.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CAOFA)의 당사국총회(COP) 인천 개최 사례를 언급하여, 러-우 전쟁 이후에도 10개 당사국이 모두 참여해 합의 도출한 점을 실용적 협력 사례로 평가. 다자체제의 회복력 입증 사례로 제시
업무⑨	NPAC 운영위원회 업무협의 (2.4, 수)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2.04.(수) 10:30~11:30 / Clarion Hotel The Edge 회의실 - (주요 참석자) Gosia Smieszek-Rice 북극이사회 AMAP 부사무총장 겸 NPAC 운영위, 김엄지 KMI 극지전략연구실장, 유지원 KMI 극지전략연구실 연구원
수행결과	□ NPAC 내 분과위원회(sub-committee) 신설 및 NPAC 향후 운영 방안 논의 - (KMI) 현재는 NPAC*이 매우 폐쇄적인 구도로 진행되는 만큼 더 많은 분야별 전문가 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기후변화, △과학, △원주민, △산업(북극항로, 인프라), △안보 및 지정학 등 5개 분과위원회(sub-committee)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 NPAC은 KMI와 미국 동서문화센터(EWC)와 공동으로 2011년부터 매년 미국에서 개최하는 북극 컨퍼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런스로, 북태평양 중심의 북극 이슈를 조망하고, 역내 협력 강화 목적으로 추진 - (Gosia) 8월 NPAC 본회의 때까지 전문가들을 모아 회의를 하는 것이 가능할지 미지수.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고자 하는지? - (KMI) 3월 중순 경 NPAC 준비를 위한 운영위 VC를 진행한 후, 분과위원회별 VC 등을 진행한 후, 전문가들의 제안/의견 취합 진행, 운영위로 동 의견들 상정하는 구조로 NPAC 준비 진행 예정. 일단 올해는 시범운영 차원에서 1~2개 분과를 운영해 보는 것으로 EWC와 협의 완료 □ NPAC 2026 개최일자 - (Gosia/KMI) 구체적으로 논의된/ 염두에 둔 일정이 없는 고로, 8월 초경 추진 가능하나 추후 운영위 전원과 협의 필요 □ 분과위 전문가 추천 - (Gosia) 그림자함대 관련 전문가 1인, 사라 올스빅(Sara Olsvig) 이누이트환북극이사회(Inuit Circumpolar Council) 의장 등 분과위 전문가로 추가 요청 □ NPAC 2026 추진 방안 - (Gosia/ KMI) 이전에 EWC측과 논의한대로, 북극항로 뿐만 아니라 북극해 운항 관련 전반에 대한(북동항로, 북서항로, 중앙 북극해 등을 모두 아우르는) 논의 진행 필요
업무⑩	노드대학교 CHNL, HNC 업무협의 (2.4, 수)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2.04.(수) 17:30~19:00 / Radisson Blu Hotel 회의실 - (주요 참석자) Kjell CHNL 센터장, Andreas HNC 센터장, KMI 김엄지/유지원/한다희
수행결과	1. CHNL - NSR 화물군 도출 □ 화물 타당성 연구 관련 - CHNL은 기존에 화물 타당성 관련 연구 경험을 다수 보유함 - 노르웨이 연구비는 단가가 높아 추가 자원 필요 가능성이 존재함 - 단기 과제보다는 장기 협력 프레임에 관심이 있음 - 단순 화물군 선정은 한계가 있으며, 허브 항만 전략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유치 대상 화물, 형성 가능한 시장, 배후시장 및 산업 연계 구조 검토 필요함) - CHNL은 일본 파트너들과 이 연구와 유사한 논의를 수행한 경험이 있음 □ 예산 관련 - 1만 달러는 약 10~15일 정도 작업이 가능한 수준임 - 기초자료 구축 정도에 따라 연구기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존재함 - 연구 범위 및 기간을 간략히 정리해서 공유해주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2. HNC -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및 리스크 분석 □ 공급망 구축 관련 - 수소는 누출 및 압력 관리에 민감하여 안전 리스크가 큼 - 법 전문가는 아니나 관련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함 - 현재 안전한 저장·생산·유통 관련 연구 수행 중으로 공급망 분석과의 연계 가능성이 존재함 - 노르웨이에는 'Energy in the North' 등 관련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며 기술·법률 파트너도 존재함. 현재 안전한 저장·생산·유통을 연구 중으로,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음 □ HNC 제안 - 규제 비교 분석은 매우 노동집약적이어서 비용이 상당하기에 세부 국제법·EU법까지 확대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음 -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검토 후, 트렌드·개요 중심의 보고서는 현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이 가능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세부 분석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현행 법·규제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는 접근이 예산상 적절할 것으로 보여짐 □ 유사 보고서(Arctic Business) - 이 보고서의 목적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 기회를 가시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 인구·경제 동향을 분석함 
업무⑫	북극프론티어 세션 참석(The Ebb and Flow of Economies) (2.4, 수)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2.04.(수) 15:30~16:45 / Clarion Hotel The Edge, Margarinfabrikken - (주요 참석자) Håkon Haugli 이노베이션 노르웨이 CEO, Ben Mallott 알래스카 원주민연맹 회장, Whitney Lackenbauer 트론티대학교 교수, Miki Jensen 이노베이션 사우스 그린란드 국장, Joanna Kuntonen-van't Riet 앵글로 아메리칸 핀란드 대외협력 매니저, Michael Mcnair 북극경제개발공사 CEO
수행결과	<세션 1: 미국의 관세 정책,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북극에서의 중국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오해까지, 글로벌 경제의 흐름이 지역 현실과 어떻게 충돌하는가?> □ (Miki Jensen) - 최근 그린란드 자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금광 운영 및 희토류 등 광물 투자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전통 산업 중심 지역에 다국적 기업 유입시 지역에 실질적인 이익이 남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산업 간 협업으로 지역 일자리, 서비스 기회를 만들고자 함 - 투자자들의 1차적 목적은 '경제'이지만, 그린란드는 인구가 적고 분산되어 인프라를 자체 구축해야 하는 고비용·원격지라는 제약이 큼. 따라서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회복력이 생기지 않으며, 회복력을 만드는 것은 소유권(재정적·정치적)과 역량임 □ (Whitney Lackenbauer) - 러시아를 제외한 7개 유사입장국은 우려와는 달리 과거부터 중국의 직접 투자를 관리 및 제한해옴. 앞으로 중국은 국영기업의 직접 투자보다는 우호국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가안보 심사 기준 이하의 구조로 이사회 통제권을 확보하고 가치사슬을 지배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음. 즉, 중국이 단순히 광물을 채굴하는 것이 아닌, 글로벌 가치사슬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음 □ (Joanna Kuntonen-van't Riet) - 광업은 책임 있게 추진될 경우 지역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임. 광산은 한시적 사업(20~50년)이므로 사후(post-mining) 경제 기반 마련이 중요하며 핀란드 라플란드 사례처럼 초기 설계 단계부터 지하 채굴, 환경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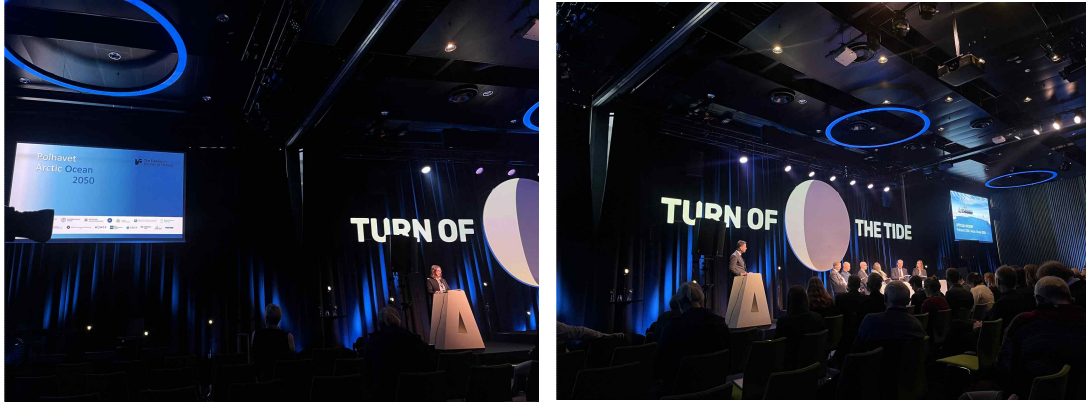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세션 2: 기업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력하여 회복력 있는 북극 경제를 만들 수 있는가?> □ (Michael Mcnair) - 캐나다는 북서항로 주권 유지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를 결합한 이중용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이누이트가 오래전부터 제안해온 방향임 - 지역 다수 소유와 리더십이 있을 때 의사결정이 신속해지고 신뢰가 형성되며, 항만 운영 등 핵심 인프라는 지역 주민이 주도해야 실질적 경제적 배당이 지역에 환원됨 □ (Ben Mallott) - 알래스카의 특징은 많은 원주민 기업들이 지표권뿐 아니라 지하자원권(subsurface rights)까지 보유하는 동시에 주권적 통치권을 가진 부족 정부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임. 소유권은 일 자리를 창출하고, 역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 속에서 소유권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 □ (Håkon Haugli) - 북극을 개방적으로 유지하되 책임 있고 포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공공조달·규제·위험 완화 지원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함. 노르웨이의 전기 운송 사례처럼 정부가 규제와 조달, 위험 분담을 결합하면 시스템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음 - 경제 발전이 환경을 훼손할 위험은 존재하지만 관리 가능하며, 오늘날 기업 활동은 과거보다 환경 기준과 인식이 크게 강화된 상태임 
업무⑬	북극경제이사회 업무협의 (2.5, 목)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2.05.(목) 11:00~13:00 / Clarion Hotel The Edge 회의실 - (주요 참석자) Mads AEC 사무국장, Irina Zhilina AEC 자문관, KMI 김엄지
수행결과	□ 그린해운 프로젝트 - 바렌츠경제이사회 편딩으로 북극 그린 해운 프로젝트 진행할 예정이며, KMI도 같이 참여하길 희망함. 주요 요지는 port-to-port로 북극 항만에서 우리나라 부산/울산/포항까지 병커링, 화물 등을 어떻게 해야 최적화할 수 있는지 노선을 그려보고자 함 - 가능하다면, KMI도 약 1만 달러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 연구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제안함 □ Greenland future 2026 - 해당 컨퍼런스에서 북극경제이사회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는 항만 및 기업 방문 프로그램으로 자세한 사항은 향후 공유하겠음. KMI도 참여하길 희망함 □ 북극협력주간 - 정확한 날짜가 정해진 후 공유해주면 북극경제이사회 일정에 반영하겠음 - 한-북극 청색경제 세미나를 2일차 메인세션으로 진행하고자 함. 북극경제이사회는 공급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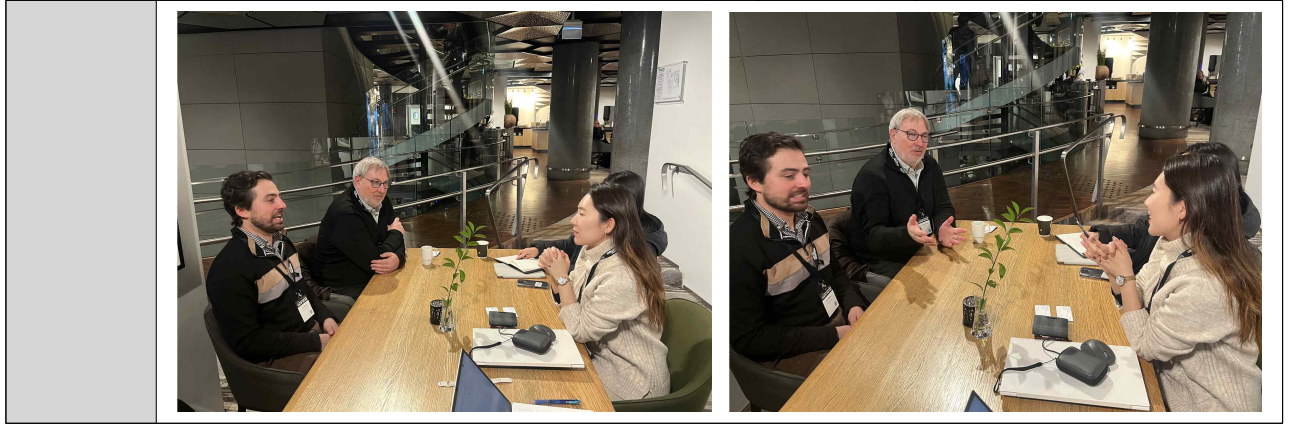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차원에서 자원-생산자-운송(항만)-수요 등 공급망 노드별 전문가를 초청하는 것을 제안하며, 어떤 화물을 중점으로 할지 조금 더 논의해보고자 함 □ 기타 - 한화오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희망함 - 해양수도권 및 북극항로 연구 관련 자문 역할 제안
업무⑭	북극프론티어 세션 참석(Arctic Ocean 2050) (2.5, 목)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2.05.(목) 11:00~12:30 / Clarion Hotel The Edge 회의실 - (주요 참석자) Bodil A. Bluhm UiT 교수, Zoe Koenig UiT 박사후연구원, Morven Muilwijk 노르웨이극지연구소(NPI) 연구원, Elizabeth Jones 노르웨이 해양연구소 연구원 등
수행결과	□ (Bodil 교수) - '북극 해양 2050'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진행. 동 프로그램은 2024년부터 논의가 진행된 프로젝트이자 이니셔티브로, 2026년 1월 1일부터 10년간 진행되는 프로젝트. 노르웨이 18개 대학들이 협력하여 컨소시엄을 이루어 진행될 예정 - 노르웨이가 북극 관련 정보 및 데이터를 모으는데 있어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며, 북극해가 개방되는 상황 하에서 미래 북극 변화를 예측하고 새로운 북극해의 상황에 맞는 관리 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초학제적 협력을 추진할 예정 - 6개의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각 북극해의 물리적 환경, 생지화학, 생물학 및 거버넌스 등에 관련한 주제로 구성 □ (Zoe Koenig 박사후 연구원) - 물리 해양학 전공자로, 해양 순환 및 해류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 북극의 생태계는 아주 독특하여, 접근이 어렵고 관측 데이터가 부족. 예컨대, 해빙 아래에서 자라는 조류인 빙하 조류(Sea ice algae)의 경우 빛과 영양염을 통해 자라게 되는데, 이들이 어떤 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 불명확.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규명하기 위해서는 '북극 해양 2050'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동 프로그램을 통해 물리 해양학이라는 분야를 넘어 물리-생물-생태가 연계된 다학제적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 (Morven Muilwijk 연구원) - 북극에 대한 관측 자료들과 기후 모델을 혼합하여 해빙감소, 대서양수 유입 변화, 담수 유입 같은 요인이 북극해를 변화시키는 요인에 대해 연구 중. 그러나, 현재의 기후모델이 북극해의 순환 등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제약이 큰 바,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측 데이터가 필요. '북극 해양 2050' 프로그램은 북극해에 대한 관측 강화를 강조하는바, 데이터의 공백을 메우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 □ (Elizabeth Jones 연구원) - 화학 해양학을 전공하여, 탄소 및 영양염 순환과 대기에서 바다로 Co2가 흡수되는 과정, 해양 산성화 등에 대해 연구 중. 이와 관련, 북극에서의 해빙이 줄고 온난한 대서양수의 유입이 커져 개방구역(open water)이 늘어나는데, 이는 바다와 대기가 직접 접촉하는 면적을 키우고 결국에는 대기 중 Co2가 바다로 더 많이 유입되어 북극해의 산성화를 촉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연중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기-얼음-해양 사이 Co2의 교환 과정 등에 대한 관측이 특히나 부족. '북극 해양 2050'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관측의 공백을 메울 수 있으리라 소망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⑤	Ocean Conservancy 업무협의 (2.5, 목)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2.05.(목) 14:00~15:00 / Clarion Hotel The Edge 회의실 - (주요 참석자) Henry, Alex Ocean Conservancy 연구원, KMI 김엄지/유지원/한다희
수행결과	□ 오션 컨저번시(Ocean Conservancy) 기관 소개 - (Ocean Conservancy) 귀 기관은 미국을 기반으로 한 NGO로, IMO 내에서의 활동은 물론 '중양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CAOFA)'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 북극 이슈에 대해 미 정부 관계자들에게 자문 제공 - 본부는 워싱턴에 위치하며, 알래스카 앵커리지 사무소 또한 운영 중이고 그 밖에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지사가 존재. 앵커리지 사무소의 경우 현장에서의 수요와 필요성을 파악하여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나 각 지사들은 지역적 상황과 맥락을 중시하며 활동 □ CAOFA의 향후 방향성 - (Ocean Conservancy) CAOFA는 EU, 한국 등 북극해 연안국 외 비북극권 국가들도 당사국으로 참여한 첫 북극 국제규범 사례로, 한국은 CAOFA 이행을 돕기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 - CAOFA의 사례는 매우 성공적으로 판단되는 바, CAOFA 다음 북극 관련 국제규범은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 - 특히, 어업 외의 분야(sector)별 접근이 필요한데, 수산업은 일종의 초기 단계에서의 마중물과 같은 분야라 생각하며, 어업 다음으로 △북극 해운, △해저 광업 및 채굴, △해저 케이블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관련하여 CAOFA의 포맷을 차용해 북극권, 비북극권 국가들 간의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사료 - (KMI) 한국 정부는 CAOFA 당사국으로서 CAOFA의 성공적 이행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바, 관련 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노력 중 □ 북극해운 관련 논의 - (Ocean Conservancy) 북극해운에 대한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 (KMI) 첫 번째로는 부산, 제주, 울산 등 동남권 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들 지역의 기반 산업인 철강, 조선, 해운 산업과 북극해운을 연결시켜 새로운 산업 기회 창출을 도모 - 두 번째로는, 단기적인 북극항로의 활용에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북극해에서 운용 가능한 쇄빙선, 북극항만과 한국의 항만 연계 등을 고려한 전략을 구상 - (Ocean Conservancy) 한국의 입장이 그러하다면, 앞서 언급한 CAOFA 향후 방향성 관련, 북극해 인프라 산업에 대한 규범 논의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다만, 지식 기반 관점에서 문제를 조망할 필요가 있어 준비를 위한 시간은 반드시 소요될 것으로 예상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 주요 업무 내용을 10개 내외로 작성
- *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관련 사진, 도표 필요시 추가)
- *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필요시 조정)